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4
----------	------

제출연월일 : 2019. 9.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따른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정비(안 제2조)
- 나. 조례와 조례시행 규칙 간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안 제2조의2)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1조)
- 라. 조례에 감면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 절차 규정 정비(안 제22조)
- 마.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안 제23조)
- 라. 조례에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멸시효기간을 통일하여 적용하는 규정마련(안 제25조)
- 바. 조례에 연체 이자율 적용과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 규정 정비(안 제 24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7월 25일 ~ 8월 13일(20일)

나. 의견 내용 : 덧붙임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수질관리과**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미터”를 “직선 거리 300미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8조,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로 하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처리비,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8.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9.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10.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11.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 한다”를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채권)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채무)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 제27조의3 및 제28조를 각각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7조)제4항 중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하수도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하수도과장 김원동
	팀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이희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희종 (790-544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부터 <u>300미터</u>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u>직선 거리 300미터</u> ----.
<u>&lt;신 설&gt;</u>	제2조의2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

현행	개정안
	<p><u>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u></p> <p>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u>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u></p> <p>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른 <u>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u></p>
<u>제5조 삭제</u>	<u>&lt;삭 제&gt;</u>
<u>제6조 ~ 제8조</u> (생략)	<u>제5조 ~ 제7조</u>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u>제9조 삭제</u>	<u>&lt;삭 제&gt;</u>
<u>제10조 삭제</u>	<u>&lt;삭 제&gt;</u>
<u>제11조 삭제</u>	<u>&lt;삭 제&gt;</u>
<u>제12조 삭제</u>	<u>&lt;삭 제&gt;</u>
<u>제13조 ~ 제15조</u> (생략)	<u>제8조 ~ 제10조</u>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p><u>제16조</u>(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u>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 한다.</u></p> <p>②·③ (생략)</p>	<p><u>제11조</u>(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u>&lt;신 설&gt;</u>	<p><u>제22조(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처리비,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p>



현 행	개 정 안
	<p>2. <u>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u></p> <p>3. <u>「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u></p> <p>4. <u>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u></p> <p>5. <u>「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u></p> <p>6. <u>「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u></p> <p>7. <u>「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u></p> <p>8. <u>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u></p> <p>9. <u>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u></p> <p>10. <u>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수도사용료가 감면된 경우</u></p> <p>11. <u>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u></p>
<u>제17조 ~ 제22조</u> (생략)	<u>제12조 ~ 제17조</u> (현행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p><u>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u></p>

현행	개정안
	<p>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제23조 ~ 제24조의3 (생략)	제18조 ~ 제21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4조의3까지와 같음)
<p>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li> <li>3.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li> <li>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li> <li>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li> </ol>	<p>제25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권)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li> <li>2. (채무)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li> </ol>

현행	개정안
<p><u>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u></p> <p>6.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사용요금은 누진을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p> <p>7.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사용요금은 누진을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p>	<p>&lt;삭 제&gt;</p>
<p>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p>	<p>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날 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u>사용료, 연체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u>	
<u>제27조의3</u> (생략)	<u>제26조</u> (현행 제27조의3과 같음)
<u>제28조</u> (생략)	<u>제27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하수도법 >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총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 민법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 지방재정법 >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지방세기본법 >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합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 지방세징수법 >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이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검토결과

조 항	제 22조(감면 등)
제출자 및 의견	<p>○ 제출자 : 건설과장</p> <p>○ 의 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류식 구간(덕풍·신장동 등 구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류식 관거가 미설치되어 있어 정화조설치 등 관리 비용을 개인이 별도 부담하고 있음.</li> </ul> <p>정화조 처리비용 등을 하수도 사용료에서 일부 감면하는 조항 신설요구</p>
부서 검토 결과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식지역의 주민들이 오히려 합류식 지역의 발생원가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li> </ul> <p>* 합류식(톤당원가) : 1,830.37원</p> <p>* 분류식(톤당원가) : 1,685원</p> <p>* 총괄원가(톤당원가): 1,726.55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상 비용부담에 관하여 감면에 대한 법령이 없음</li> <li>- 현재 요금산정 방식인 총괄원가 방식으로는 합류식, 분류식으로 엄밀하게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함.</li> </ul> <p>따라서 기존 방식인 총괄원가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p> <p>※ 하남시 정화조 처리비용 감면 타당성 용역(2018.9월)결과 반영</p>